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VIP 리포트

- 선진국 진입, 사회자본 확충이 좌우한다
– 사회자본(Social Capital)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 원, 백흥기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02-2072-624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선진국 진입, 사회자본 확충이 좌우한다

: 사회자본(Social Capital)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Executive Summary	i
1. 사회자본의 중요성	1
2. 융통성에 밀린 신뢰, 작은 준법정신부터 실천하자	3
3. 시사점	12
【HRI 경제 통계】	15

< 요약 >

사회자본의 중요성

- 최근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이나 법질서 위반 행위 등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경제 발전에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유발하여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에 걸림돌로 작용함
- 따라서 신뢰, 법질서 준수 등 사회자본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살펴봄으로서, 선진국 진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융통성에 밀린 신뢰, 작은 준법정신부터 실천하자

<p>융통성을 권하는 사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전체 사회시스템에 대해 신뢰하는 국민이 과반수 이하(4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문별로는 사법시스템(52.1%), 행정시스템(46.7%), 입법시스템(18.0%) 순서 - 자녀에게 법질서 준수보다 융통성있는 삶을 권하는 부모 과반수(50.1%) - 다만, 과거에 비해 우리사회의 신뢰 수준이 개선되었다는 의견 54.1%
<p>신뢰사회가 안되는 4가지 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작은 준법정신에 소홀한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뺑소니와 같은 중범죄를 신고하겠다는 사람들은 90.7%에 이룸 · 반면, 경범죄에 해당하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겠다는 사람은 51.7%에 불과함 - 둘째, 사적 관계가 우선되는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뺑소니 신고 정신은 높지만, 친구라면 그냥 모른척 한다는 의견 43.1% · 일처리 시 친구나 친척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비율 85.4%에 이룸 - 셋째, 결과 지상주의가 만연한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공하면 정직하지 못한 사람도 사회지도층으로 용인되는 분위기(84.0%) · 결국, 사회지도층을 신뢰하다는 의견은 23.5%에 불과 - 넷째, 남의 눈치를 봐야 하는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대로만 일을 처리하면 타인과의 관계가 불편해진다는 의견도 56.7%
<p>편법의존 경향 극복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법 의존 경향 극복을 위해 관련 법 개정(45.4%)이 우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호한 법규정(25.7%), 편법 처벌 관대(19.7%) 등 법 관련 의견 많음 - 향후 우리나라의 신뢰사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낙관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낮지만 다른 사회구성원에 대한 신뢰 높음(76.4%) · 개인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신뢰사회 정착 가능(61.2%)

시사점

- ① 작은 약속부터 지키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야 함
- ② 사회시스템 각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신뢰 프로세스 구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③ 방송 프로그램이나 시민단체 운동 등 신뢰사회를 부업시키는 각종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함
- ④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신뢰사회로의 전환 계기를 마련해야 함

1. 사회자본의 중요성

○ 사회자본과 경제 성장

- 최근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이나 법질서 위반 행위 등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도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짐
- 갈등이나 부패 등 사회적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는 사회자본¹⁾이 확충될 경우 국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음
 - Knack and Keefer(1997)의 1980~81년과 1990~93년 29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신뢰가 10% 하락 시 경제성장률은 약 0.8%p 하락
 - Whiteley(2002)는 1970~92년 3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신뢰가 1% 증가할 경우 1인당 실질GDP가 약 0.6% 상승한다고 주장
 - La Porta et al.(1997)은 신뢰가 정부 효율성, 사회 효율성, 시민 참여 등에 양의 영향을 끼친다고 발표
-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패지수²⁾는 OECD 국가 중 하위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 성장 동력을 저해하고 있음
 - OECD 국가들의 평균 부패지수는 7.0점으로 한국의 4.7점보다 2.3점 높음
 - 한국은 각종 법·제도 개선 등 부패방지 노력을 통해 국가 청렴도를 제고시켜 OECD국가 평균에 이를 경우 연평균 1인당 명목 GDP는 138.5달러, 경제성장률은 명목기준으로 연평균 0.65%p 상승시킬 수 있는 것으로 추정

< 부패 방지에 따른 한국의 경제성장 상승 효과 >

구분	평균 부패지수(p)		1인당 명목 GDP 상승효과	명목 GDP 상승효과
	OECD	한국		
'95~'10년 평균	7.0	4.7	138.5 달러	0.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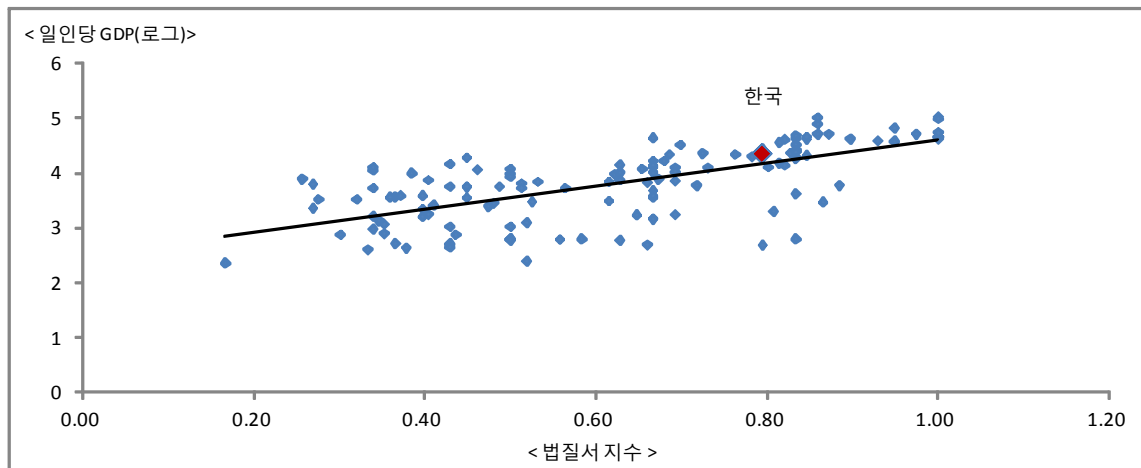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2012.5), '부패와 경제성장'

- 1) Fukuyama에 따르면, 사회자본이란 집단의 구성원 사이에 비공식적 가치와 규범들의 실증적 집합으로서 이들이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것이라고 함
- 2) 부패지수는 세계은행, 프리덤하우스, IMD, 세계경제포럼 등 각 기관들이 기업인과 전문가들에게 실시한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청렴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산출. 10점 만점으로 0점이 가장 부패한 수준임

○ 선진국 진입에 필요한 사회자본

- 법질서 준수, 신뢰 등 사회자본은 한 나라의 선진국 진입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 특히, 법질서 준수와 일인당 GDP와의 상관관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질서 등 사회자본 확충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자본의 중요 요소 중 하나인 법·질서 지수³⁾가 OECD 국가 중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 선진국 진입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더욱 심화시킴
 - 1998년부터 2012년 까지의 법·질서 지수와 2012년 각국의 일인당 GDP와의 상관관계는 0.67로 높게 나타나 일인당 GDP가 높을수록 법·질서도 잘 준수됨
 -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발전 정도에 비해 법질서 준수 수준이 낮은 편에 속해 법질서 준수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사회자본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살펴봄으로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질서 준수와 일인당 GDP >



자료: OECD, Political Risk Services Group 자료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자체 계산
 주: 법질서지수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지수, 일인당 GDP는 2012년 자료

3) PRS Group 그룹이 발표한 한국의 1998-2012년 평균지수는 0.79(1점 만점)로 OECD의 평균 지수 0.85를 하회하며, 순위로는 20위권 밖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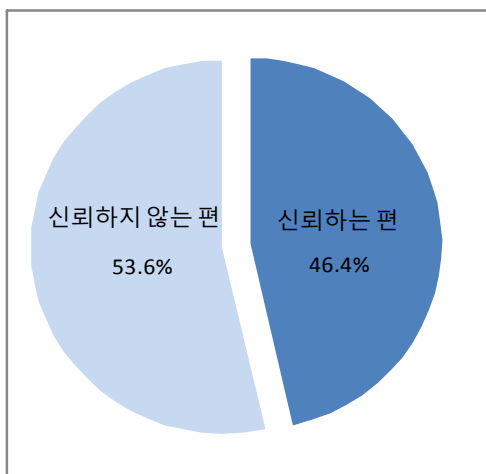
2. 융통성에 밀린 신뢰, 작은 준법정신부터 실천하자⁴⁾

1) 사회시스템에 대한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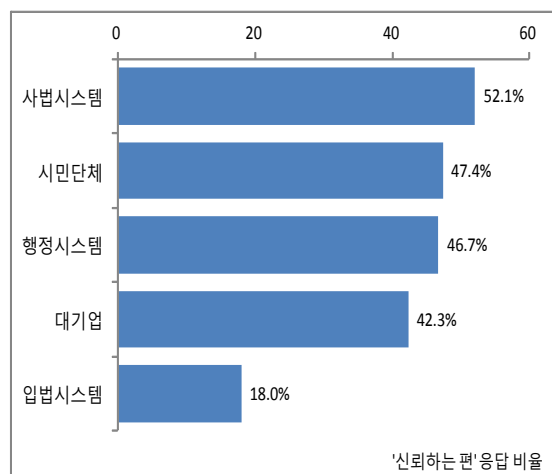
○ 사회시스템 신뢰 여부

- 우리나라 사회시스템에 대해 국민들이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는 향후 신뢰사회로의 도달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잘 나타냄
 - '귀하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의 세부항목인 '전체 사회시스템에 대한 종합 평가' 부문에서 '매우 신뢰'와 '신뢰하는 편'의 비율이 46.4%임
-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인 반면, 입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은 편임
 - 사법시스템(52.1%), 시민단체(47.4%), 행정시스템(46.7%), 대기업(42.3%), 입법시스템(18.0%) 순서로 나타남
 - 신뢰사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시스템이 과반수 이상의 신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이 긍정적임

<전체 사회시스템 신뢰 여부>



<각 부문별 사회시스템의 신뢰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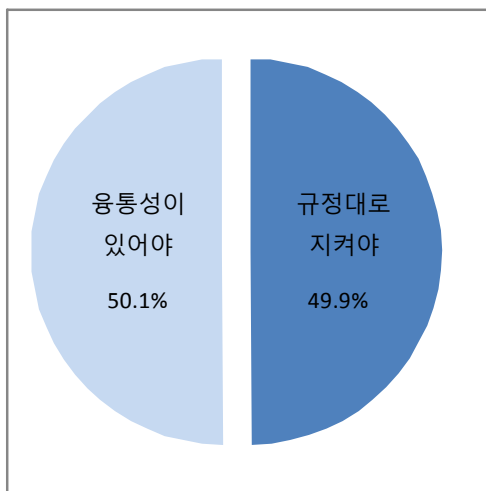
주) 현대경제연구원 2013년 12월 설문조사

4) '신뢰사회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전국 성인 남녀 815명을 대상으로 2013년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 간 전화조사로 진행되었다. 조사의 최대 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49%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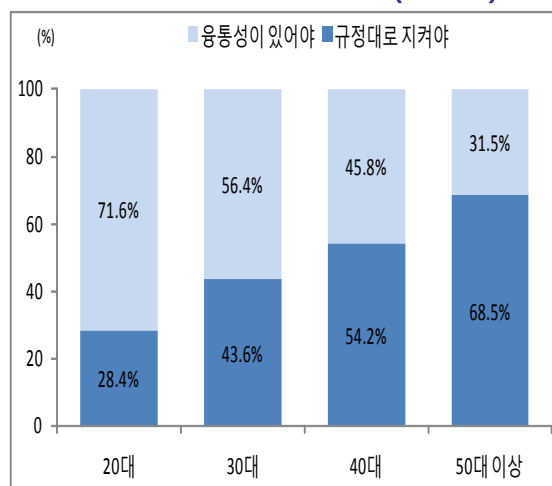
○ 융통성을 원하는 부모

-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자녀들에게 법·질서 준수가 아닌 적당한 융통성을 지녀야한다고 충고하고 있음
 - ‘귀하는 자녀에게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충고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적당한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50.1%였으며, ‘법·질서를 규정대로 지켜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49.9%임
 - 부모조차 법·질서의 준수가 아닌 융통성을 권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사회 현실을 잘 보여줌
- 연령별로 살펴보면, 젊은 사람일수록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20대(71.6%), 30대(56.4%), 40대(45.8%), 50대 이상(31.5%)의 순서로 나타남
 - 50대 이상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이래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20대는 현실에서의 융통성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사회생활을 잘하는 방법>



<사회생활을 잘하는 방법(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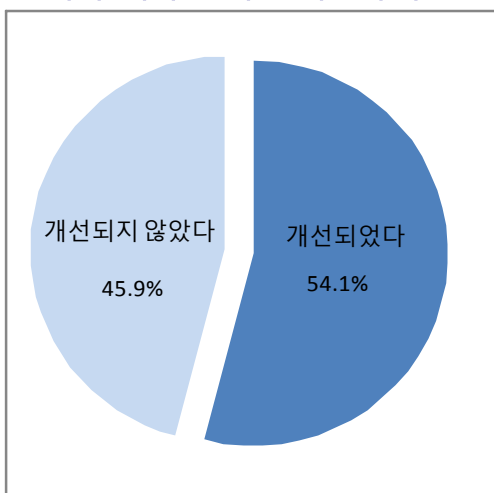


○ 신뢰사회 수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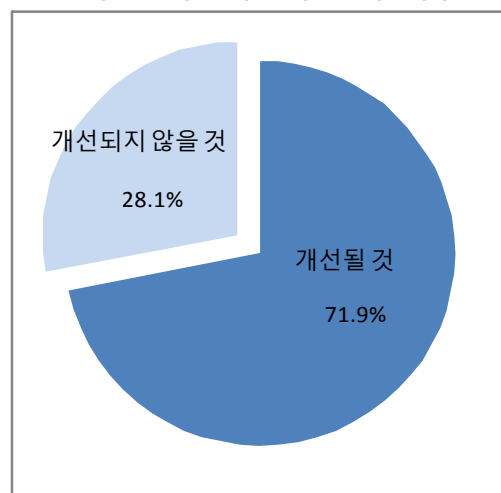
- 우리나라 국민 과반수 이상이 10년 전에 비해 우리나라 사회시스템의 신뢰 수준이 개선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음
 - ‘귀하는 10년 전에 비해 우리나라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의 신뢰수준이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44.2%가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함
 - 현재 우리나라 사회시스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신뢰 수준을 높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신뢰 수준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 이이 10년 전에 비해 우리나라 사회시스템의 신뢰 수준이 개선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음
 - ‘귀하는 10년 후 우리나라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의 신뢰수준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71.9%가 향후 신뢰 수준이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함
 - 우리나라 사회시스템의 신뢰에 대한 미래 기대는 더욱 높아 향후 우리나라가 신뢰 사회로 도달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짐

<과거 대비 현재 신뢰사회 수준>



<향후 신뢰사회로의 변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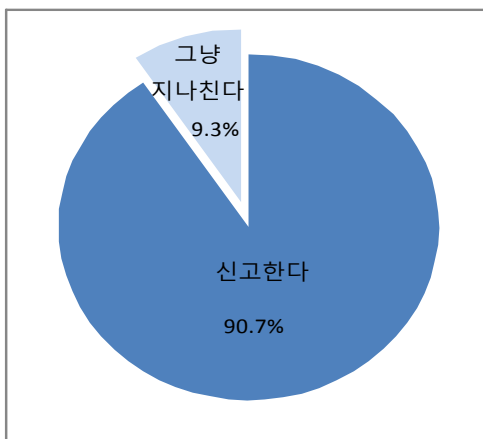
2) 한국 신뢰사회의 특징

① 작은 준법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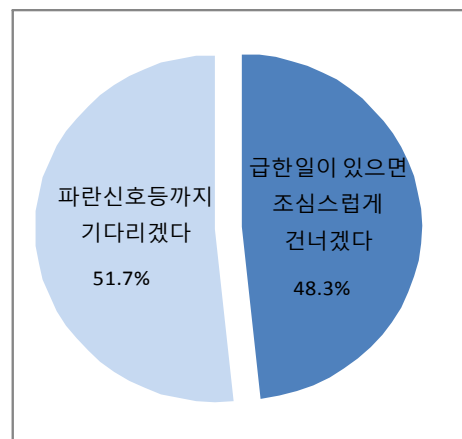
○ 작은 준법정신에 소홀한 한국 사회

- 우리나라 사람들은 뺑소니와 같은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귀하가 뺑소니 차량을 목격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의견에 90.7%의 사람들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응답함
 - '신고를 할 경우 귀찮아 질 수 있으므로 그냥 지나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9.3%에 불과함
- 반면, 경범죄 수준에 해당되는 교통신호 위반에 대해서는 좀 더 너그러운 태도를 표명하고 있음
 - '차가 없는 도로에서 빨간 신호등을 만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의견에 51.7%의 사람들만이 '파란 신호등이 켜질 때까지 반드시 기다렸다 건너겠다'라고 응답함
 - '급한 일이 있다면 주위를 잘 살피고 조심스럽게 건너겠다'라고 응답한 사람들도 48.3%나 됨

<뺑소니 차량 신고 여부>



<빨간신호등에 건너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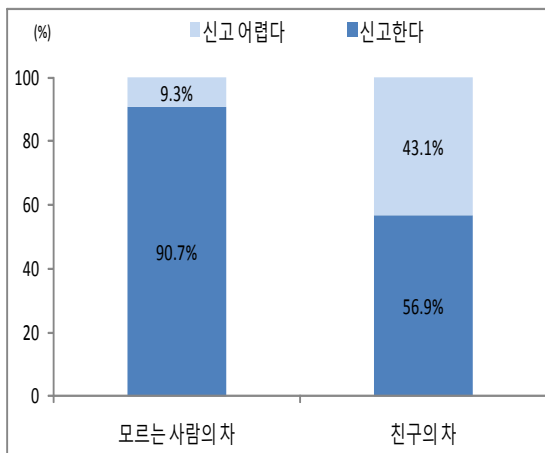


② 사적 친밀감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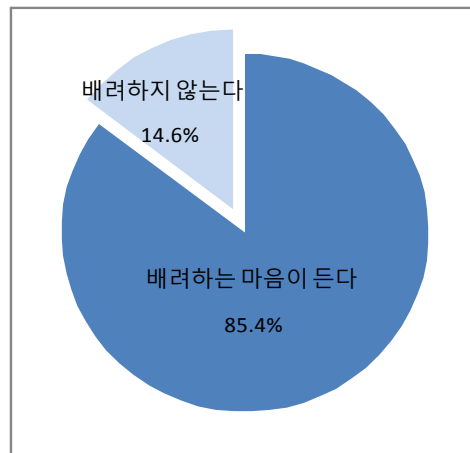
○ 공적 관계보다 사적 관계 우선

- 국민 10명 중 9명 정도는 우리나라를 공적 관계보다 사적 관계를 우선시 하는 사회로 인식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법·질서 등 공적 관계보다 지연, 학연, 혈연 등 사적 관계가 우선시되는 사회라는 의견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동의한다’와 ‘동의하는 편이다’라는 응답비율이 88.1%임
- 예를 들어, 뺑소니 신고의 경우도 친구의 차라면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고 나타남
 - ‘만약 뺑소니 차가 귀하 친구의 차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친구이더라도 경찰에 신고한다’라는 응답이 56.9%로 그냥 모르는 사람일 경우의 90.7%보다 훨씬 낮게 나타남
- 또한, 일처리를 할 때도 친구나 친척을 배려하는 마음이 든다고 응답해 사적 친밀감이 매우 높은 사회임을 알 수 있음
 - ‘일처리를 할 때 친척이나 친구를 마주치면 어느 정도 배려하려는 마음이 든다’라는 의견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85.4%임

<뺑소니 차량의 신고 여부>



<일처리 시 친구나 친척 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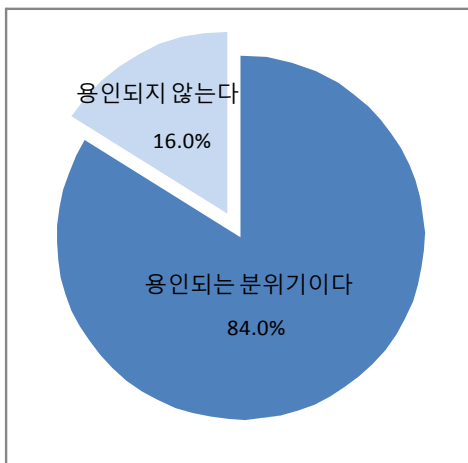
③ 성공에 대한 집착

○ 결과 지상주의 만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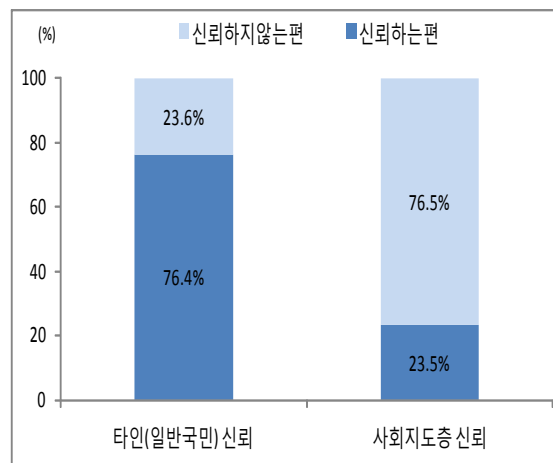
-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우리나라가 성공만 하면 부도덕하고 정직하지 못한 과거도 용서하는 사회라고 인식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정직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성공하면 사회지도층으로 용인되는 분위기’라는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84.0%에 이침
 -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성공만 하면 과정 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용서되는 사회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음

- 이런 분위기는 국민들의 사회지도층에 대한 인식에 그대로 반영되어 사회지도층을 불신하는 경향이 큼
 - ‘우리나라의 사회지도층은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신뢰한다’와 ‘신뢰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23.5%에 불과함
 - 다른 사회구성원에 대한 신뢰가 70%대가 넘는 반면, 사회지도층에 대한 신뢰는 20%대에 머물고 있어 사회지도층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음

<정직하지 못한 사람도 성공하면 사회지도층 용인>



<사회지도층에 대한 신뢰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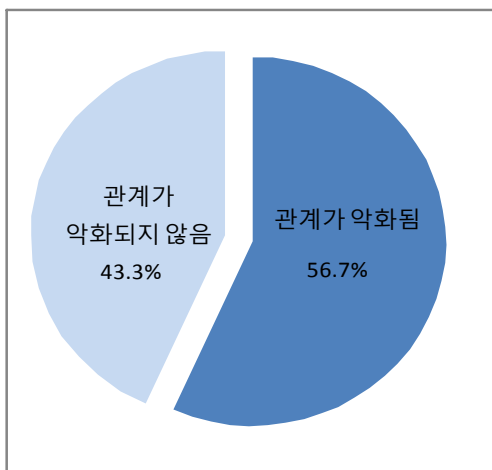


④ 타인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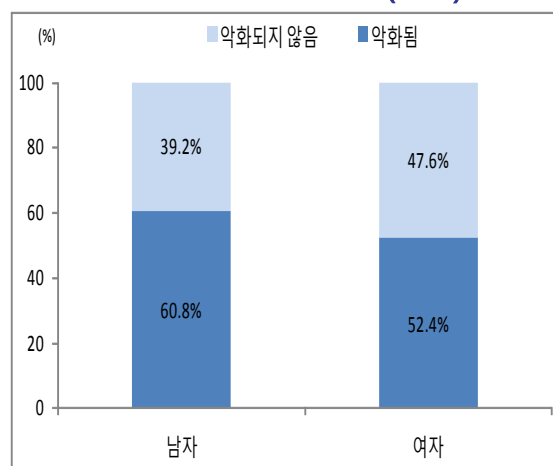
○ 규정대로만 하면 타인과의 관계 불편

-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6명 정도는 엄격한 규정 준수가 타인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내가 범질서나 규정을 너무 엄격하게 준수하면 주위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라는 의견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이 56.7%나 됨
- 엄격한 규정 준수가 타인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은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 좀 더 강하게 동의하고 있음
 - 남자들의 경우 엄격한 규정 준수가 타인과의 관계를 악화시킨다는 응답이 60.8%에 이르고, 여자의 경우 52.4%임
 - 상대적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이런 인식에 좀 더 동의하는 이유는 사회생활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 악화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집단주의적 경향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타인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사항임
 - 따라서 엄격한 규정 준수가 나의 문제를 넘어 타인과의 관계까지 불편해질 수 있다고 인식된다면 법·질서 준수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규정준수와 인간관계>



<규정준수와 인간관계(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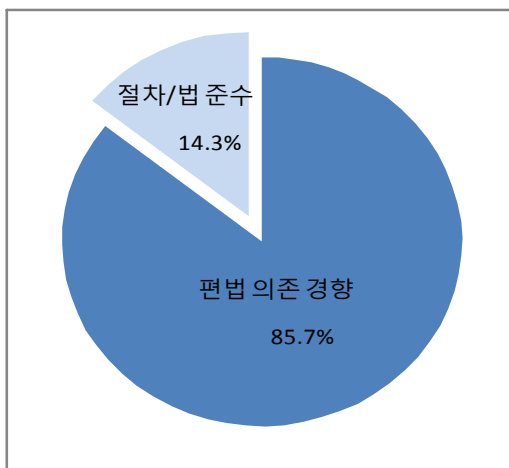


3) 편법 의존 경향의 극복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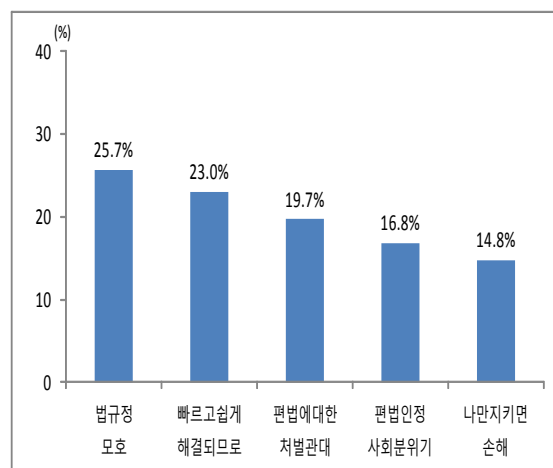
○ 정상적인 법규정 준수보다 편법에 의존

-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법규정 준수보다 편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사회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강함
 -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절차나 법을 지키기보다 편법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동의한다’와 ‘동의하는 편이다’라는 의견이 85.7%에 이름
- 편법 의존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호한 법규정이 국민들로 하여금 편법을 사용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므로, 모호한 법규정을 개선시키도록 노력해야 함
 - ‘왜 정상적인 절차나 법을 지키기보다 편법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법규정이 모호하고 단속기준도 오락가락하므로’라는 응답이 25.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편법을 통하면 문제가 빠르고 쉽게 해결되므로’라는 응답이 23.0%, ‘편법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서’ 19.7%, ‘결과만 좋으면 사소한 편법 정도는 용서되는 사회분위기 때문에’ 16.8%, ‘편법에 의존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만 규정을 지키면 손해이니까’ 14.8% 등의 순서로 나타남

<우리나라 사람의 편법 의존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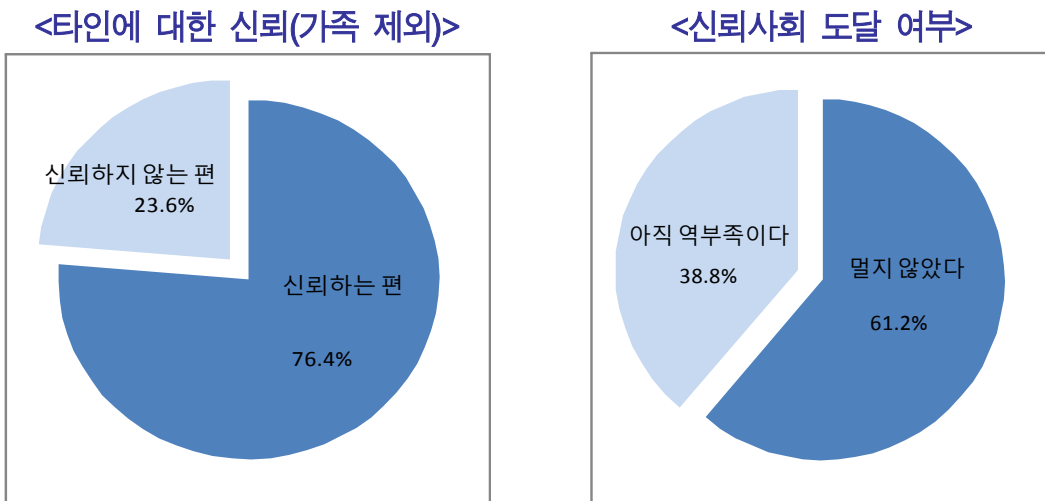
<편법 의존 이유>



○ 신뢰사회로의 전환 가능성 높다

-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타인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음
 - '귀하는 가족을 제외한 타인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신뢰한다'와 '신뢰하는 편이다'라는 응답 비율이 76.4%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 사회시스템에 대해서는 불신이 약간 높게 나온 것에 반해, 사회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신뢰가 훨씬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의 신뢰사회 전환의 실마리는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임

- 타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신뢰사회로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귀하는 우리나라 사회구성원들의 수준을 볼 때 향후 신뢰사회 도달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개개인이 조금만 노력하면 신뢰사회가 멀지 않았다'라는 응답비율이 61.2%에 이룸
 - '신뢰사회로 나아가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라는 의견은 38.8%에 불과해 우리나라의 신뢰사회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3. 시사점

○ 첫째, 작은 약속부터 지키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야 함

- 어려서부터 작은 준법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 등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신뢰사회 관련 교육을 밀도있게 받는 경우가 별로 없으며, 전반적인 분위기가 긍정적이지 못해 의지가 있는 사람들조차 이를 실천하기 힘든 경우가 다반사임
 - 따라서, 작은 약속부터 지키는 사회적 분위기를 활성화하여 어려서부터 신뢰사회와 관련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둘째, 사회시스템 각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신뢰 프로세스 구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입법, 사법, 행정시스템 각 부문에서 신뢰가 부족한 이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특히, 입법시스템 등 국민들의 신뢰가 극히 저조한 부문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 따라서, 방안 마련 등이 요구됨

○ 셋째, 신뢰사회를 붐업시키는 방송이나 시민단체 운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적극 마련해야 함

- 과거 '정지선을 지킵시다'와 같은 방송 프로그램은 물론, 관련 시민단체의 운동에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설문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신뢰와 불신의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금만 더 신뢰 부문을 확산시키면 신뢰가 불신을 압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할 수 있음
 -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각종 방송 프로그램이나 시민단체의 협조를 통해 신뢰를 붐업시키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여 함

- 넷째,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신뢰사회로의 전환 계기를 마련해야 함
 - 신뢰사회 문제는 시민이 주도적 역할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이므로 사회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이 필요함
 - 특히, 우리나라 사회시스템에 대해서는 불신이 약간 높게 나온 것에 반해, 사회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신뢰가 훨씬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의 신뢰사회 전환의 실마리는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임 **HRI**

장후석 연구위원 (2072-6234, chahus@hri.co.kr)

별첨 : 응답자 특성표

		사례수(명)	비중(%)
전 체		(815)	100
성별	남 자	(413)	51.0
	여 자	(397)	49.0
연령	20 대	(194)	24.0
	30 대	(182)	22.5
	40 대	(191)	23.6
	50대 이상	(243)	30.0
직업	사무직	(363)	45.0
	영업 및 생산	(89)	11.0
	자 영 업	(95)	11.8
	학 생	(87)	10.8
	농 임 어 업	(10)	1.2
	주 부	(122)	15.1
	무 직 및 기타	(41)	5.0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62)	20.7
	400만원 미만	(325)	41.6
	600만원 미만	(201)	25.7
	600만원 이상	(93)	11.9
학력	고등학교이하	(191)	23.7
	대졸 이상	(614)	76.3

HRI 경제 통계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구분	2011	2012	2013					2014		
			1/4	2/4	3/4	4/4	연간(E)	연간(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3.7	2.0	1.5	2.3	3.3	-	2.6	3.8	
	민간소비(%)	2.4	1.7	1.5	1.7	2.2	-	2.0	2.7	
	건설투자(%)	-4.7	-2.2	2.4	7.1	8.0	-	3.7	2.5	
	설비투자(%)	3.6	-1.9	-11.9	-5.1	1.8	-	-1.5	6.7	
대외거래	경상수지(억 \$)	261	481	100	198	190	-	695	490	
	통관기준	무역수지(억 \$)	308	283	56	144	108	133	441	370
		수출(억 \$)	5,552	5,479	1,353	1,412	1,368	1,464	5,596	6,067
		증감률(%)	(19.0)	(-1.3)	(0.4)	(0.7)	(2.7)	(4.7)	(2.1)	(8.4)
	수입(억 \$)	5,244	5,196	1,297	1,267	1,260	1,331	5,156	5,697	
		증감률(%)	(23.3)	(-0.9)	(-3.0)	(-2.8)	(0.3)	(2.5)	(-0.8)	(10.5)
소비자물가 상승률(%)	4.0	2.2	1.6	1.2	1.4	1.1	1.3	2.4		
실업률(%)	3.4	3.2	3.6	3.1	3.0	-	3.3	3.1		
원/달러 환율(평균, 원)	1,108	1,127	1,085	1,123	1,111	1,062	1,095	1,070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